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2026. 1.



교육부

목 차

I. 추진 배경	01
II. 추진 경과	03
III.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과제	03
IV. 비전 및 목표	06
V. 추진 과제	07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07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16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22
4. 제도적 기반 마련	26
VI. 과제별 소관 부서 및 추진 일정	32

I. 추진 배경

- 우리 국민은 갈수록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중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 갈등 인식 심화와 민주주의 저해 】

- 국민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선택 : 19위('20)→14위('23)→9위('24)→4위('25) (SK 사회적가치연구원, 2025)
- '타인의 의견 존중' 중요도 인식 : 88.7('22) → 81.4('23) → 77.6('24)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5)
- 한국 성인 71%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스럽다'라고 응답해 23개국 중 3위 기록(퓨리서치센터, 2025)

- 학교 안에서의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 교육을 통해 학생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하고 미래세대 신뢰 구축 필요

※ 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는 비율 51%에 불과 (서울 지역 고등학생 1,058명 설문조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2025.3월)

-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익히는 '교실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학생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배운 성숙한 공적 시민으로 성장시킬 시점

- 「교육기본법」과 現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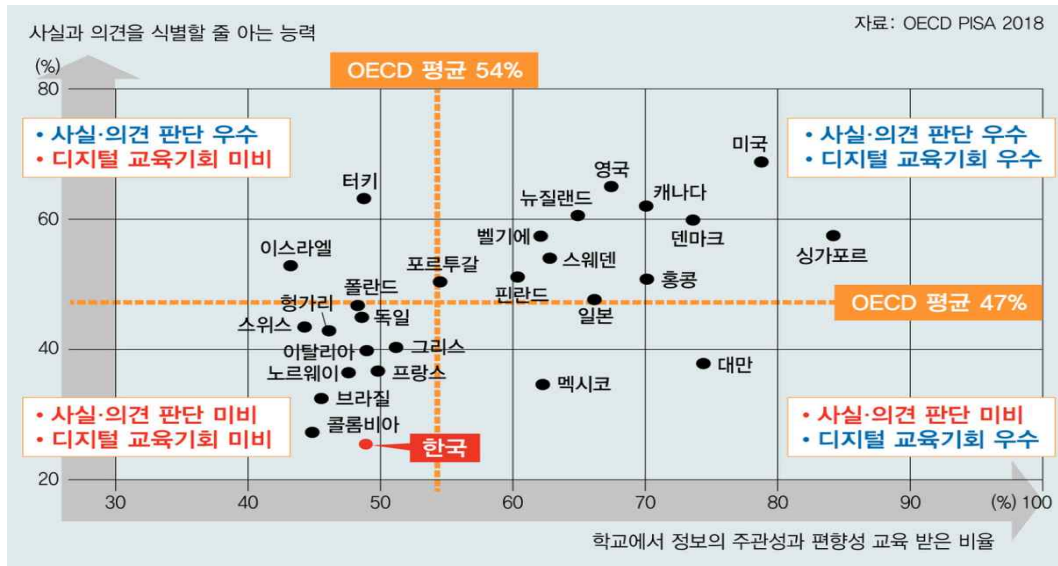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중략)…**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후략)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특히 디지털·미디어 기술은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촉진했으나, 편파적 정보 습득 등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성찰 필요



(출처 : 한겨레, 2021.5.16.)

-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다원주의 강조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 시대의 민주시민교육도 요구되는 상황
 - ※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25.11월, 탄녹위)
- 시기에 따라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의지가 달라 전담부서와 지원 규모*의 변동 등 불안정한 정책 추진 지속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백만원) : ('21)2,738→('22)1,900→('23)2,100→('24)1,082→('25)705
-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율성 및 현장 전문성을 토대로 특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확산 노력 지속
 - ※ 14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
 - * 서울'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대전'학생 사회참여 실천학교' 등
- 법적 근거 등 안정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 실정에 맞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과 전체·지역 중심·참여 중심 민주시민 교육 강화

II. 추진 경과

- 새정부 국정과제 100번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설정(25.8.)
- 시도 담당관 회의(9.2, 11.25.)

“민주시민교육의 세부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에 근거해 명확화 필요”

- 민주시민교육 현장전문가 간담회 실시(9.19.)

“특정 교과를 넘어 다양한 교과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 확장 필요”

- 교원단체,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구성(10.2.)
-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분석」 정책연구 착수(10.17.~26.2.23.)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11.3.)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 지속(11월~)
-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11.7, 12.5.)

“토론 수업 등을 함에 있어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 수립 및 법제화 필요”

- 헌법 수업 참관 및 민주시민교육 현장 간담회 개최(12.1, 장관)
- 대통령 말씀(12.12,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것”

III.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과제 ※ 자문단 및 시도담당자 회의, 연구보고서, 언론 등 종합 검토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자유로울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워야”

-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존중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균형 있게 배울 필요

〈 기본권 〉		〈 공동선 추구 〉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제10조~제22조	국민주권의 원리	제1조제2항
평등권	제11조	복리증진	제10조 후단
신체, 사생활의 자유 등	제12조 제17조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제40조 제66조 제101조
경제적 자유	제119조제1항	사회권, 환경권 등 공동선 지향 규정	제34조 제35조

- 헌법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고, 타인과의 공존과 연대 등 시민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을 범부처가 체계적으로 지원

**“법적으로 명확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 교육환경의 변화 및 미래사회 대응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이 시도마다 다르고 불분명하여 개념 정립이 필요
 - ※ 관련 교육 : 헌법교육, 선거교육,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학계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한편, 미디어의 영향으로 학생의 사회참여 수요가 높아지고 참정권*도 확대되었으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교 토의·토론 수업은 미진
 - * 선거권('20)·피선거권('22) 연령 18세로 하향,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하향('22)



-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수업에서 균형 있게 배우도록 보호해 학생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지원할 필요

▪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교 안에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수업 원칙’을 수립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법제화 추진

**“지역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 안착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 민주시민교육은 지역에서 다양한 자생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간 분야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은 부족
 - *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

- 지역·교사별로 교과 연계도, 중점 분야가 달라 전문성·위계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부담을 경감하면서 고르게 제공될 필요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학교교육의 시민성 증진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예비 교원부터 관리자까지 연수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의 전문성 함양
-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개발해 지수화하고, 세부 분야별로 측정하여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개선 성과 확인

“학생들이 일상과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법적 근거*에 기반해 시도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정책결정 참여제, 학급생활협약 등 학생의 다양한 자치활동 장려 추세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 자치활동) :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아직 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 사항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거나 지역 등 자신을 둘러싼 학교 밖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구조 미흡

-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문화 전반에서 민주시민의 의사결정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자치와 지역사회 연계 적극 지원

IV. 비전 및 목표

비전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목표	< 지식·이해 > 민주주의 핵심 가치 이해 및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 함양	< 과정·기능 > 공동체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협력적 소통·참여 역량 제고	< 가치·태도 >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실천적 태도 내면화

추진 방향
“특정 교과에서 전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 “지식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전환”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범위 확장”

추진 과제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①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전문화·내실화 ② 체계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확대 ③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 지원 ④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및 역량지표 개발로 체계적 성과 관리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①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②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③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④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발굴 지원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①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②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③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④ 성인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4. 제도적 기반 마련	▲ ①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② 학교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정립 및 지원체계 강화 ▲

V. 추진 과제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 ❖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등 적극 추진
- ❖ 범부처 협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 강화
- ❖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및 학생 민주시민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체계적 성과 관리

①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전문화·내실화

- 학생들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전문적 교육 제공
- (헌법교육 강화) 헌법 제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연계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토론형 수업 지원

◆ 교육과정 내 헌법교육 반영 현황

- 초등(5~6학년) 및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정치·법과사회 등 교과목 성취 기준에 '헌법' 내용(헌법에 규정된 인권·기본권, 헌법의 기본원리 등) 포함

- 헌법교육 전문강사의 지원 대상 기관을 초·중학교('25) → 고등학교('26)까지 확대하여 학교급별 맞춤형·참여형 수업 실시(법무부)
※ (25.下) 초중학교 913학급 실시 → ('26) 초중고등학교 약 2,000학급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헌법교육 역량 강화
* '26년 교(원)장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 헌법교육 필수 반영(중교연·헌재연 협업)
** 법제처 협업을 통한 시도 교원 연수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 등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하는 (가칭) 「헌법채널 e」를 제작하고, 방송 송출 및 교육자료 활용 추진(3월, EBS 개발·법무부 검수)
※ 1편당 5분, 총 6편을 개발(헌법 개념/헌법 주요 원리/기본권/통치구조 등)
- 토론형 헌법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26.6월)하여 지식 전달 위주 수업 대신 토의·토론 기반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지원
※ EBS 개발 「헌법채널 e」와 연계하여 교육자료 개발(KEDI)

-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헌법교육 자료*를 시도협의회를 통해 공유(~'26.3월), 이후 플랫폼을 통해 자료 공유 및 확산

※ 예시 : (서울) 헌법과 민주주의 수업자료, (부산)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연계 헌법교육 도움 자료, (전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 (선거교육 활성화) 18세 선거권, 16세 정당 가입 허용*에 따라 학생들이 적절한 선거 지식을 갖추고 주체적인 주권자가 되도록 지원(선관위 협업)

* 선거권(공직선거법, '20.1.14.) 및 피선거권(공직선거법, '22.1.18.) 연령 18세로 하향,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하향(정당법, '22.1.21.)

◆ 교육과정 내 민주주의·선거교육 반영 현황

- 초등(3~6학년) 사회 및 중학교 사회·역사, 고등학교 한국사·통합사회·정치·법과 사회·윤리와사상 등 교과목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 '선거' 내용* 포함
* 민주주의 원리 및 의미, 법치주의·권력 분립 등 관련 제도, 선거의 기능·원칙 등
- 범교과 학습주제로 '민주시민교육' 포함

-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학생 기초소양 증진 및 가짜뉴스 확산·왜곡 방지

〈 2026년 학생 대상 선거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 용	목표 인원(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	고교 학생·청소년 대상 선거절차·정치관계법 및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40만
민주주의 선거교실	초·중학교 학생·청소년 대상 투·개표 절차 참여학습	2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6.6.3.) 대비 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등 정치관계법 Q&A*를 학교에 안내하고, 각종 교육자료 제작·배포

*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학교 구성원의 실제 질의사항을 종합하여 Q&A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지원

【2026년 중앙선관위 협업 선거 교육자료 개발 현황】

- (교원용) 「대한민국 새내기 유권자 지도를 위한 학생 선거교육의 이해」 (총 5차시, 3월, 중앙교육연수원)
- (학생용) 학교급별(초·중·고) 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및 동영상 자료(5분×3편)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 선거교육을 운영하여 교원의 학생유권자 지원 역량 강화('26. 시도별 5회 내외)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선거교육 관련 교원 대상 직무연수 과정 운영('26~)

2 체계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확대

-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하며, 올바른 미디어를 생산하도록 소양교육 확대

◆ 교육과정 내 디지털 소양 반영 현황

- 교육과정 내 '디지털 소양'을 학습 지속 역량*으로 규정하고 전 학년 교과군에서 교육
 -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 정보 외 교과 디지털 소양 관련 내용 >

교과	내 용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활동 시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관찰, 실험 ■ 탐구 데이터를 디지털 자료로 제작,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유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특성에 적합한 공학 도구의 선택 및 활용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미디어 역량으로 재구조화 하고 '매체' 영역 신설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료 활용(영상지도·아카이브·콘텐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탐색 및 의견 공유
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교육 강조

- 2015 교육과정 대비 정보 시수 2배 확대(초등학교 17→34시간, 중학교 34→68시간)

참고 국제기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강조 추세

- 유네스코(UNESCO)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2010) 및 디지털 권리, AI, 디지털 건강과 보안 등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소를 추가하여 개정(202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9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미디어와 AI 리터러시' 지표 포함 계획 발표

- (학생 디지털 미디어 역량 함양) 디지털·미디어 내용을 선별·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별 있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문해 능력 함양 지원
 -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올바른 미디어 정보를 이해·판별·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7월)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26. 36개교, 방미통위)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에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및 온라인 뉴스 활용교육(e-NIE) 프로그램 등 교육자료 지원('26. 670개교, 문체부)

○ (교원 전문성 지원) 관계부처와 함께 교원의 수업 역량 함양

- 책임감 있는 미디어 참여형 소비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에게 '팩트체크 교실'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 담당 교사에게 수업 가이드·교구재 등 제공('26. 150개교)

- AI·디지털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을 담은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25.2월)를 생애주기별로 고도화하고 관계부처 자료를 분류·제공(함께학교 탑재)

* 과기부, 문체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등

〈 학령기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교육부, 2025.2) 〉

목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형성하고, 디지털 창의력을 갖춘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디지털 안전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정체성 형성 ▶ 디지털 범죄, 디지털 과의존·중독 예방 ▶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예절 익히기 ▶ 디지털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능동적 소통 ▶ 디지털 세상에 참여
디지털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법 익히기 ▶ 가짜 정보 판별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 ▶ 디지털 콘텐츠 제작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수업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5.2월, 미리네 탑재)

※ 학교급별 △주제중심형 △교과융합형 △중점교과형 수업 모델(총 62개) 및 현장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학생 활동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발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수업 도움자료(교사 안내서, 학생활동지 등) 개발·배포('26.~)

3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 지원 강화

- 글로벌 복합 위기 등 새로운 미래 사회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개념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참고1]

- 2022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르쳐야 하는 교수학습의 영역 및 내용과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요소를 도출하고 추진과제 설정
- △ 문화 다양성 △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 디지털 사회와 미디어 △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시장경제와 시민 생활 △ 인권 △ 헌법과 법치주의 △ 지구촌 문제와 세계시민 △ 환경 및 생태 시민성을 민주시민교육의 지식 요소로 설정

-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확장되도록 「환경교육법」 개정* 추진(기후부 협업, '26년~)

- * △ 학교 환경교육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무로 명확화 △ 학교 환경교육 개념을 생태전환 교육을 포괄하도록 확장 △ 학교 환경교육 지원 기반 강화

◆ 교육과정 내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반영 현황

- 사회·과학·실과·도덕·기술·가정·환경 등 관련 교과에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내용 포함
- 범교과 학습주제로 '환경·지속가능발전' 포함,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통합 교육

-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원리가 구현되도록 유네스코 GEP*를 바탕으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 (25년) 생태전환교육 선도학교 운영 안내서 개발 → (26년) 학교 전체적 접근 위한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 (27년) 우수 모델 발굴·확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 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2022~) :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4가지 주요 영역(①학교의 녹색화②교육과정의 녹색화③교사 훈련④지역사회)을 중심으로 포괄적·체계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

- ①학교 구성원의 녹색생활 실천·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녹색생활 실천학교'(26. 10개교) 시범사업 추진(기후부)

※ 태양광 설치 학교 대상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 컨설팅 지원(교육부, '26.10월~)

- ②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확대(25. 초·중등 →26. 유·초·중등), ③교원 연수체계화 모델 및 실행안내서(25. 개발완료)를 토대로 교원 연수 시범 운영(26. 340명 예정)
- ④시도교육청이 부처·지자체·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 생태전환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지원
- *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학년별·학교급별 수업 모델 개발 등

○ (다문화 이해교육)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는 역량 함양

◆ **교육과정 내 다문화 이해교육 반영 현황**

-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 포함, 국어·사회·도덕·음악·미술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다문화 감수성과 공존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지정·운영(26., 신규 25교)하여 학교의 **다문화이해교육 역량 강화 및 수업 모델 발굴·확산**
- * 旣운영중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추진
- ** 타문화 이해, 체험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인식 개선과 공존의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의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신규 개발·운영(26.上, 4종)**

○ (세계시민교육) 더 넓은 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혐오 발언 대응을 주제로 한 수업자료 개발·확산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혐오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서(25)」 기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학교 수업자료 개발·배포(~26.12월)

- (경제·금융·노동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실생활과 연계한 수업 모델 개발·확산

◆ 교육과정 내 경제·금융 교육 반영 현황

- 학교급별 관련 교과에서 성취기준에 경제·금융 관련 내용 반영

학교	교과(목)	주요 성취기준
초	사회 (3~4학년)	[4사07-01]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 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실과 (5~6학년)	[6실02-01] 시간이나 용돈과 같은 생활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생활자원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탐색한다.
중	사회	[9사(일사)08-02]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을 계획한다.
	기술·가정	[9기가02-12]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고	통합사회	[10통사2-03-03]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금융과 경제생활	[12금융01-02]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나타난 금융 서비스의 변화된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인간과 경제생활	[12인경03-02] 자유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탐구한다.

- 범교과 학습주제로 포함, 사회·실과·기술·가정·경제·실용경제 등 관련 교과와 연계 교육

- 연구학교('26. 20개교 내외 → '27. 30개교 내외)를 통해 학교급별 특성 및 실제 삶과 연계해 경제 이해력을 강화하는 교육 모델 개발·보급
- 초·중·고등학교가 지역 내 금융회사와 결연(약 9,000개교)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 실시(금융위·금감원)
 - * 1사 1교 금융교육 : 금감원 주관, 금감원의 초·중·고 생활금융 표준교재(강의안) 등으로 교육 실시
- 초등교사, 중등 경제 담당 및 비경제 담당 교사 대상 경제·재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경제교육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재정부, 약 300명)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교원·전문가 등 대상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 정책 진단(고용부)
 - ※ 관련 교과목 : 사회, 도덕, 실과, 진로와 직업, 인간과 경제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성공적인 직업생활

- (평화·통일교육)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배우며 평화 의식과 감수성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 반영 현황

- 범교과 학습주제로 '통일교육' 포함, 도덕·사회 등 교과와 연계한 교육 추진
- 통일교육주간(5월 4주) 등을 활용하여 교육

- 통일부에서 양성한 전문강사의 학교 방문 교육 실시('26. 480여 개교), 현장 교원 연수 확대(통일부)

4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및 역량지표 개발로 체계적 성과 관리

-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 (프레임워크 마련)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과·범교과 내 학습주제를 학교급·학년별 재구조화하여 민주시민교육 요소 강화
 - 민주시민교육 내용요소 및 관련 용어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민주시민교육 해설자료로서 보급('26. 12월)
 - (플랫폼 지원)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관별 교육자료, 체험학습처, 프로그램을 매핑(mapping)하여 안내('26.9월~, 에듀넷)
 - 매년 말 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프레임워크와 연계한 학생 참여형 교육자료·프로그램을 순차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보급·관리
 - * 예시 : 헌법교육(법무부, 헌재연), 선거교육(선관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방미통위, 문체부과기부),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기후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통일부) 등
 - 학교급별·교과별 교원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자료 공유·확산
- 국·검·인정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시민교육 관점에서 검토 및 개선
 - (교과서 모니터링)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과용 도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 주요 검토 관점에 '세계시민·다문화' 관점 추가('26.4월)
 - ※ '26년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초등 5~6학년군 국정도서(국어·도덕)를 현장교원 등 약 100명이 모니터링하여 발행사에 피드백

【 현행 교과서 모니터링 주요 검토 관점(한국교과서연구재단) 】

- △ 표기·표현의 정확성 △ 내용의 적절성 및 편향성 △ 내용의 적합성
- △ 내용의 연계성 및 계열성 △ 교과서 현장성 △ 교과 역량 강화의 효과성
- △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 교과서 내 양성평등·인권 분야의 적정성

□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진단을 위한 '학생 민주시민 역량 지표'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 (역량 지표 개발)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이 갖춰야 할 지식·기능·태도·가치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핵심 요소를 측정하여 정책 효과를 증거 기반 분석

【국제사회 주요 민주시민 기준】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2018 '글로벌 역량'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민주적 시민·인권 핵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세계적, 상호문화적 사안(issue) 설명하기 ▪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인정하기 ▪ 문화 전반에 걸쳐 개방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 집단의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 존엄, 인권, 민주주의 ▪ 태도 : 개방성, 관용, 성찰 ▪ 기술 : 비판적 사고, 경청, 갈등관리 ▪ 지식 : 제도, 역사, 법치 이해

- 정책연구를 통해 민주시민의 정의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지표로 개발 및 시범 실시('26) → 학생 표집평가 실시('27) → 단계적 확산('28~)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의 ICCS 2022】

-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 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22)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사

인지 영역		정의적-행동적 영역	
아는 것	추론 및 적용	태도	참여

▼

주제(내용) 차원			
시민사회와 시스템 · 국가기관 · 경제 시스템 ·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원리 · 공정성 · 자유 · 법치 · 지속가능성 · 연대	시민 참여 · 의사결정 · 영향력 행사 · 공동체 참여	시민 정체성 · 시민 · 시민적 자아상 · 시민적 유대감

- (현황 분석)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학교·교원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26.12월)

* (예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는 시간(교과창체 등),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인식 정도, 교원의 관련 활동 참여 여부, 외부기관 연계 경험 비율, 민주시민교육 실시 어려움 이유 등

- (성과 공유회) '민주시민교육 성과 공유회'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 정책·선도학교 및 교원의 우수사례 발굴·확산('26. 상·하반기 2회)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 시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고,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수학습 원칙을 법제화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1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 수립 및 법제화 추진(국회·국교위 협업)

○ 현재 14개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조례에 기 반영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시도 조례 주요 공통사항】

△ 헌법 계승 △ 사적 이해관계 및 특정 정치적 의견 관철에 이용 금지
△ 가치 주입 금지 △ 자유로운 토론 △ 보편적 접근과 자발적 참여

○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11.25.),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12.5.)를 거쳐 방향성을 담은 원칙 예시안 마련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

① 헌법적 가치 존중 ② 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③ 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④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⑤ 강압적 주입 금지

- 국회 공청회,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토의·토론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원칙의 입법화 추진*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 등에 반영 추진

참고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년)와 마그덴부르크 선언(2005년)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채택된 독일 시민·정치교육의 제1원칙으로,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세 가지*를 합의로 도출
 - * △ 주입 금지 △ 논쟁성의 원칙 △ 자기 이익 판단 능력 강화
- 이후 마그덴부르크 선언을 통해 합의 외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 교육 활성화
 - (질문하는 학교)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활발히 토론하는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토의·토론 문화 확산
 - * ('25) 104개교 운영 중 → ('26) 150개교 → ('27) 200개교
 - (연구대회 개선) 각 연구대회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교수학습법 활용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
 - * ('26.上) 학생 참여 교수학습법 적용 가능 연구대회 발굴 → ('26.下) 개별 연구대회 시행계획 반영

2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 교육활동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선정·지원하고 우수모델 확산
 - (선도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26, 150개교)하고 성과 분석 및 선도학교를 거점으로 전국 민주시민교육 모델 확산
 - ※ ('26) 150개교 → ('27) 300개교 → ('28~) 거점 선도학교 중심 500개교 이상 확산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예시 〉

교육과정·교수학습	<p>필수 : 헌법교육 활성화</p> <p>자율과제 : 교과 수업 내 민주시민교육 실시 교과 간 연계 수업 및 프로젝트 운영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교육감 인정도서 및 교육부·교육청 개발 프로그램 활용</p>
학교문화	<p>필수 : 학생·학교 자치활동 활성화</p> <p>자율과제 : 교과 창체 등 교육활동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절차 반영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p>

※ 필수 과제를 제외하면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시도교육청의 사업 내용 활용 가능

- 교육과정·교수학습 관련하여 헌법교육을 필수 실시하고 학교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학교 자치활동 활성화를 반드시 시행

-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학교 특성에 맞게 연계 운영

* [참고3]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 개념틀」의 지식·기능·가치 및 태도 활용 가능

- 사회·수학·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시민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헌법 수업을 비롯한 **교과 간 연계수업을 활성화**하고 **참여형 수업을 권장**

〈 예시 : 수업시간에 민주시민 교육하기(서울시교육청) 〉

학년	단원	세부 내용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초4	화산과 지진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미세먼지	화산재의 활용을 학습하고, 미세먼지 활용 또는 생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초6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헌법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찾아보기
고2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과 지니계수	정적분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를 이해하고 복지 정책의 필요성 인식

- **학교 자치 실현 및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선도학교와 희망학교의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지원(중앙교육연수원 협업)

※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신설('26. 총 2회)

3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 교원이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 강화**

- (교원 연수 계획 반영) 교육부 및 교육청 교원 연수 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26~)

※ 「2026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26.1월, 교육부)에 반영 및 시도 독려

- (자격연수 강화) 교장·교감·수석교사·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경력 주기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확산('26~)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 [별표]에 既 명문화된 '민주시민교육' 주제 강조

- 학교 관리자의 헌법·선거 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장·원장 자격 연수에 관련 내용 필수 반영(중앙교육연수원·헌재연구원·선거연수원 협업)
 - ※ '25년 교(원)장 자격연수(국가정책과정)에 '헌법의 이해' 시범 도입(총347명 이수)
 - '26년 교(원)장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 전체 기수 확대 추진
- (직무연수 활성화) 각종 교원 직무연수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민주시민교육 포함 권장 및 다양한 원격연수 프로그램 지원
 - 선도학교·교사연구회 소속 및 희망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대면 직무연수 운영하여 교육청·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확산(교원대, 200명)
 -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 이해 시도 교원 연수 실시'(26. 법제처 협업 시도별 3회 내외)
 - 교원 대상 헌법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27.上)

〈 민주시민교육 관련 원격연수 중앙교육연수원 탑재 현황 〉

연수명	개발 기관	탑재 시기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이해(4차시)	헌재연구원	'25.9월
알기 쉬운 헌법이야기(8차시)	헌재연구원	'26.1월 예정
새내기 유권자 지도를 위한 학생 선거교육의 이해(5차시)	교육부 * 선관위 협업	'26.3월 예정
일상 속 살아있는 헌법이야기 공직자가 알아야 할 헌법(10차시)	법제처	'26년 중

- (학습공동체 지원) 교육청과 학교의 교사지원단과 학습공동체·연구회·동아리를 지원하고, 전국 네트워크로 우수 수업 확산

예시 시도교육청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 (경기) 세계시민 전문가 특강, 수업·연구자료 제작 및 발간, SDGs 챌린지
-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 사회 현안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배포

- 교육청의 우수 교사를 추천받아 민주시민교육 세부 분야별 중앙 단위 교사 네트워크를 구성(100명 목표)하고, 지역에 우수 수업 확산
- 교원 대상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헌법교육 참여 촉진(3~8월, 교육부장관상 수여, 헌재연구원)

□ 예비교원이 스스로의 시민성과 민주적 학급 경영 방식을 교원 양성기관에서부터 기를 수 있도록 교직과목 등 개편

- (교직과목 강화) 예비교원이 필수 이수하는 '교직과목' 내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추진(~'27.2.)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교직소양 - 교수요목 개정(안) 〉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② 교직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원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개선>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원, 민주시민 소양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후략)

- (교·사대 평가 반영)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6.3월) 교원양성대(11교) 중점 평가 내용으로 '민주시민 가치 형성' 측면에서 대학 혁신 노력 평가

4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발굴 지원

□ 시·도는 교육감 역점,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

〈 시도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 특색 사업 〉

서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강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네트워크 구축
부산	주제가 있는 다함께 배움교실	충북	함께바꿈 사회참여 프로젝트
대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충남	2025 민주학교
인천	찐시민 프로젝트	전북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광주	청소년 정치학교 운영 및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남	민주시민 지원단
대전	학생사회참여 실천학교	경북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울산	지역사회 연계 학생참여교육 이음뜰학교	경남	경남학교퍼실리테이터양성
세종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나눔의 날	제주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경기	지역 중심 세계시민교육		

- (브랜드 개발) 각 시도의 특색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26년 자율사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27년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 민주시민교육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 ('25) 705백만원 → ('26) 3,118백만원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발굴, 전국으로 확산하고 교육청의 컨설팅·장학을 통해 질 제고
- (인정도서 등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시도의 인정도서* 개발을 장려하고 학교의 고시 외 과목** 운영 지원
 - 각 시도의 선택과목 개발 현황 및 민주시민교육 인정도서가 전국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소개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 **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과목 이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승인받은 과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과목

【민주시민교육 인정도서 개발 현황】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17~’25, 총 113종)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24~’25, 총 7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18종 ■ 기후변화·생태전환 교육 22종 ■ 경제·금융·노동 31종 ■ 토의·토론 교육 16종 ■ 세계시민교육 13종 ■ 통일교육 12종 / 헌법교육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9종 ■ 기후변화·생태전환 교육 35종 ■ 경제·금융·노동 23종 ■ 토의·토론 교육 6종 ■ 디지털 시민 2종

-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2차 특교) 등 행·재정적 지원 지속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

1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 경로를 명확화하여 학교 내 시민교육 내실화
- (학생회 근거 마련) 현행 학칙에서 정하도록 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하여 명문화

참고 「초·중등교육법(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학운위 참여 활성화) 학생회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논의에 반영되도록 학교의 실태·의견을 파악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학교별 학생 참여 현황 및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시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5.7~'26.2)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학생 참여 방법 안내 및 17개 시도별 학생 참여 우수 사례 발굴·확산
 - * 참여 유형: △(안건제안) 학생대표가 학생 의견 수렴(설문조사, 학급 회의 등)하여 제안 △(학생참관) 직접 회의 참석 △(사전의견청취) 학급회의, 학급활동시간 토의·토론 등
- (우수사례 발굴·확산) 각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사례 중 체계성과 확산성을 갖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청 단위 사례집 개발 및 플랫폼 통해 공유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학생 참여교육 및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부 및 학생 자치 우수사례집 교육부·교육청 공동 개발·배포('26.2월)

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 교사·학생·학부모의 균형있는 학교 참여가 이뤄지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을 개선하여 '협력적 학교운영' 체계를 정착
- (현장 의견수렴) 교사(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26)
 -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협력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의 기능·권한 정립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 학교-학부모 자율협약 확산 등 추진(~'26)
 - 학교자치 기반이 되는 학부모의 학교협력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
 - * 학부모의 권리·의무·책임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시책 수립 근거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지원) 민주적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시도별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 * 기존 지수 운영 사례(충남·경남 등)를 시도협의회를 통해 공유
 -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공동체 실천 방안에 환류할 수 있도록 권장

< (참고) 경상남도 학교민주주의 지수 >

영역	핵심 가치			기본 원리			지원	
중분류	자유	평등	포용	자율	규범 정립	규범 실천	교육	행·재정
평가지표	·체벌 및 폭력 금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 보장	·평등한 권리 보장 ·(피)선거권 ·평등의 보장	·가치의 공유 ·상호 존중과 협력 ·소수자에 대한 존중 ·다양한 의견 존중을 통한 갈등 해결 ·학생의 권리 존중 ·교권의 존중	·활동의 자율성 ·참여형 선거 및 투표	·학교자치조직의 구성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여론 형성의 자율성 보장	·구성원의 권한 및 민주적 절차 존중 ·잘못된 집행에 대한 구제 ·민원 처리	·교육내용의 선정 및 편성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연계 ·수업방법 및 교육활동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업평가와 피드백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용자참여 설계 실시 여부 ·자치활동을 위한 시공간 제공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 ·민주시민교육 지원 ·자치회 운영 지원

- **학부모의 민주적 소통 역량을 키워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문화 조성**
 - **(학부모회 역량 강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25. 79개)에서 학교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컨설팅·연수 지속
 - ※ 학부모 5대 역량군 : ①자기돌봄 ②부모역할기본 ③자녀교육 ④학교협력 ⑤자녀자립지원
 - 학부모 지원 교사자문단(25. 35명→26. 68명) 확대하여 인근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 운영 및 사례 확산
 - **(온라인 소통)**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함께학교'(25.11. 회원수 18만) 플랫폼을 통해 교육정책 의견 수렴 및 학교공동체 우수사례 등 지원

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학생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내재화

【'UN 아동권리협약'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정책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교과 및 창체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 단계 이해 및 실천역량 함양
 - * (26, 기획예산처 협업) 국민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 (27, 법제처 협업) 법률안조례안 작성 프로그램
- **(청소년 특별회의 등 운영)**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성평등부 협업)
- **(시도 특색사업 지원)** 시도교육청의 학생 정책수립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여 시민으로서의 효능감 확대 지원
 - 각 시도별 학교연합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킹 구축(26.7월)

사례 시도교육청 학생 참여 지원 정책

- (경기, 정책구매제)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하고 도입하는 제도
- (인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교육감은 위원회의 의견·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 의무
- (부산, '생동감 토크' 학생사회참여 토론회의 장)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역 내 문제점을 찾고 토의·토론을 통해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및 수행

4 성인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 대학과 지자체를 통해 성인의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 마련
 - (교양교육 혁신) ^{가칭}교양교육 혁신모델 지원사업(2개교, 교당 1.5억)으로 경제·금융·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대학별 특색있는 시민교육 제고 지원
 -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해 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선 유도
 - ※ 기초교양교육강화: 일반대학 18개·전문대학 15개 컨설팅, 연수 3회 실시('24)
 -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헌법 강의 영상을 K-MOOC에 탑재하여 일반 국민 대상 헌법의식 제고(~'26.6월)
 -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성인이 합리적 경제·금융·노동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K-MOOC 강좌 및 청년 경제·금융·노동 토크콘서트 지원

참고 경제·금융·노동교육 지원(안)

- (온라인 강좌) 대학 진학 - 취업 - 출산 - 은퇴 등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 K-MOOC 강좌 개발('26~, 10개)
- (토크콘서트) K-MOOC 경제금융노동 강좌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맞춤형 주제로 청년 오프라인 토크콘서트 운영('26. 下)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반영) '26년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지침 중점사항으로 시민참여교육 반영('25.12월)

※ 교육부장관은 매년 평생교육진흥 수립지침을 안내하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2), 시도지사는 수립 지침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생교육법 제11조)

4. 제도적 기반 마련

-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가칭)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거버넌스와 전문기관 구축, 교육과정 개정 등을 추진

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학교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공교육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제도 기반 마련('26~, 국회·국교위 협업)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주요 내용(안)】

-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내용, 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
-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운영
- 교원 연수 및 교원양성기관 과목 개설 지원
- (가칭) 민주시민교육원 등 지원기관 설립

- 공청회 및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교육청 및 학교, 고등교육기관 등 현장 의견수렴 후에 국회·국교위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안 마련 추진('26년~)

참고 제22대 국회 교육위 발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공통 사항

민주시민교육 기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운영
학교·교원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 고등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 개설 ■ 교원 양성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 개설 ■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 지원

② 학교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정립 및 지원체계 강화

□ 범부처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 시도교육청 ·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거버넌스를 마련

○ (교육부 전담조직)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기획·총괄과 거버넌스 작동,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26.1.1.)

○ (자문단 출범) 학계,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을 위촉하여 민주시민교육 정책 의견 수렴(25. 11.월~)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개요】

- 인원 : 총 23명
- 구성 : 대학·연구 7명, 교원 등 11명, 유관기관 2명, 교육부·교육청 3명
- 임기 : '25. 10월~'27. 10월(총 2년, 필요시 임기 조정 가능)
- 역할 : 학생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방향 논의, 교원역량 강화 방안·민주적 학교 운영 방안 등 정책 자문

○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신설(25.12.) 논의 등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교육방식 관련 원칙을 도출하여 공론화 추진

○ (범부처 협의) 다양한 범교과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부 주관 범부처 협의 지속(26~)

※ 헌법교육, 선거교육,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협업 내용에 따라 관계부처 MOU 추진

- 참여 기관 : 국교위,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기후부, 고용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등

협력부처	현장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위 : 교육과정 개정 논의, 사회적 합의 추진 ■ 부처 : 교육자료·전문인력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 현장 의견 수렴 지속
범부처 협의체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장 적용 지원 	
교육청·지자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개발 ■ 주민자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 강화 ■ K-MOOC 등 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지원

- 교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 추진
 - (선택과목 개설 추진) 정책연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하고(~'26.2),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수시 개정 추진
 - ※ 고교 융합 선택 과목 신설 또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요소 강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민주시민교육의 효과 분석과 성과 축적을 위한 연구·지원기관 신설
 - (문제해결형 인문사회연구소 지정 추진)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정책연구 거점 지정·운영('26~, 3+3년)
 - 프레임워크 개발,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 정책 성과 분석, 교육과정 개정 관련 요구 분석 및 수시 개정을 위한 전문성 지원

참고 영국 크릭보고서 채택(1997년)

- 버나드 크릭 교수를 시민교육자문위원장으로 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시민교육을 '시민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 사회 참여 △ 정치 문해의 세 요소를 학년별 학습목표로 구체화
- 국가 교육과정에 중등 필수 과목으로 지정, 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는 △민주주의와 정부 △법과 정의 △시민의 권리와 책임 △경제 및 금융 △다양성과 정체성

- (가칭 민주시민교육원 신설)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의 관리·보급,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 ※ (가칭)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조항 규정

참고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 교재 개발, 토론회, 온라인 자료 제공, 연구 지원 등 연방 차원의 정치교육총괄
- 각 주는 주 정치교육원을 운영하여 정치교육과정·교사 연수·시민 프로그램 기획
- 연방과 주의 연계 구조를 통해 정치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

【참고1】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개념들

- 교육부는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수·학습의 영역 및 내용을 도출(2024)
-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2026년 민주시민 교육 추진계획」은 해당 요소들을 전제로 추진 과제 설정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다양성 △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 디지털 사회와 미디어 △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시장경제와 시민 생활 △ 인권 △ 헌법과 법치주의 △ 지구촌 문제와 세계시민 △ 환경 및 생태 시민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하기 △ 적절하고 타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기
가치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 자유, 평등, 정의 등 민주적 가치 지향 △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 △ 공동체 의식, 연대 및 협력 △ 대화와 타협, 토의·토론 등 민주적 절차 존중 △ 법과 규칙에 대한 존중 △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자기주도성과 책임감

※ 중립성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학교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참고2】 세계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 극단주의 테러 이후 체계적 시민성 교육을 강조한 EU 파리 선언('15)에 발맞춰 ‘시민성’과 관련한 국제 비교·공동 가이드라인 강화
- ❖ 이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가 법·고시·교육과정 제·개정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과목·평가·학교문화 전반으로 격상하고 있음

□ 국제비교 · 공동 가이드라인 강화

- EU 파리선언(2015.3.17.) : 극단주의 테러 이후 시민성 · 공통가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라는 각료 선언, 회원국 정책 변화 추적
- UNESCO의 글로벌 시민교육 자료(GCED, 2015) : 주제, 학습목표, 안내서 발간 이후 회원국의 정책 통합과 확산을 지속 촉진 중
- OECD PISA 2018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인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을 최초로 포함하여 각국이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설계

□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례

- 영국 잉글랜드 : 2002년부터 중등 KS3, KS4에서 시민교육을 법정 과목으로 운영하며, 민주주의 · 법 · 시민참여 역량을 명시
- 프랑스 : 2015년 도덕 · 시민교육(EMC) 전 학년 도입을 필수화하고, 조직 · 시수 · 평가를 공식화하여 중등 졸업자격시험 포함('24 재개정)
- 독일 : 2015년부터 각 주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전교과 · 전학년 차원에서 강화하고, 2024년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 책무를 재확인
- 캐나다 : 졸업을 위한 고등학교 필수 교과로 ‘시민윤리와 시민권’을 규정하며 미디어 신뢰성과 문해력,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헌법과 거버넌스, 건국 역사, 참여와 봉사 등의 주제를 강화('22 개정)
- 미국 :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시민적 태도와 행동’을 강조하는 추세로, 사회과 성취기준 개정, 시민교육 과목 신설, 디지털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등 최소 23개 주와 D.C에서 시민교육 법안 제정('23 이후)

【참고3】 학교 민주시민교육 공통 기준

기본 개념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여 이를 자신, 가정, 학교, 사회에 적용하는 교육		
시민적 가치	존중	자율	연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으로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이를 지키는 자치와 책임의 원리를 실현	사회 구성원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참여·실천
시민 역량	사회적 공감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 참여 비판적 성찰
교육활동 원칙	헌법적 가치 존중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 협약에 기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	
	특정 이념 강요 금지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학습	
	논쟁성 재현	논쟁적 의견과 그 정보는 균형 있게 제공되고 토의·토론을 통해 스스로 판단토록 격려	
	학습자 가치 존중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치는 존중되며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음	
정책추진 원칙	현장성	협업성	보충성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정책 추진 원칙】

- 현장성** : 현장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협업성 : 교육기관, 주체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러한 기반에서 협업
보충성 : 정책 주체의 층위와 역할에 따라 추진 정책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함

【학교 민주시민교육 공통 기준(2020, 교육부)】

- △ 교원·학생·관계자 등 권역별 포럼을 통한 숙의(총 5회, 1,100명),
 △ 시도 전문직협의회(총 8회), △ 정책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총 10회) 등을 거쳐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개념, 가치, 시민역량, 원칙 등 도출

VI. 과제별 소관 부서 및 추진 일정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부서	추진 일정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1-1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전문화·내실화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확대	법무부 보호정책과	'26.4분기
	헌법교육 교육자료(EBS 영상콘텐츠·토론형 교육자료)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2분기
	시도교육청 개발 헌법교육 자료 수합 및 공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1분기
	학생·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선거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연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안내자료 등 배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26.2분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원연수 지원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추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연중
1-2	체계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확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방미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및 '팩트체크 교실' 지원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연중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기반 범부처 자료 플랫폼 탑재	교육부 인재정책총괄과	연중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배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중
1-3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 지원		
	혐오 발언 대응 세계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26.4분기
	「환경교육법」 개정 추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연중
	녹색생활 실천학교 시범사업 실시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연중
	생태전환교육 자료 개발·교원역량 강화 등 지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중
	다문화이해교육 학교 및 교원역량 강화 등 지원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연중
	경제·금융·노동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과	'26.4분기
	교원 대상 경제·재정교육 직무연수 실시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26.4분기
	1사 1교 금융교육 실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금감원 학교금융교육팀	연중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조사 실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26.4분기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및 교원 연수 실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 원내교육운영과	연중
1-4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및 역량지표 개발로 체계적 성과 관리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3분기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 주요 관점 내 세계시민다문화 관점 반영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6.1분기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민주시민교육 성과 공유회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 2회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2-1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도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질문하는 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연중
	개별 연구대회 내 '학생 참여 교수학습법 활용 여부' 반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2-2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시도교육청	연중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경영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중앙교육연수원	'26.4분기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부서	추진 일정
2-3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2026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내 민주시민교육 반영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5.4분기
	자격연수 내 민주시민교육 교과 운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시도교육청	연중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실시·운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시도교육청	연중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교원 연수 실시	법제처 법제교육과	연중
	민주시민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발굴 및 탑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2분기
	시도별·중앙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시도교육청	연중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헌법재판연구원	'26.2분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추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7.상반기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교원양성대 중점평가 민주시민교육 반영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26.1분기
2-4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발굴 지원		
	2027년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도교육청	'26.4분기
	학교 인정도서 개발 및 고시 외 과목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연중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3-1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학생자치회 법제화 추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생자치회 등 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6.4분기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활동 사례집 개발	시도교육청	'26.4분기
3-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교육 3주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실시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6.4분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등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연중
	시도별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운영 지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학부모회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연중
	함께학교 플랫폼 정책 의견 수렴 및 학교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연중
3-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부처 협업하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과	연중
	시도교육청 학생 참여 사업 지원	시도교육청	연중
	전국 단위 학교연합학생회 워크숍 실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4분기
3-4	성인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기초 교양교육 강화사업 내 민주시민교육 포함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26.4분기
	헌법 강의 영상 K-MOOC 탑재 지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6.2분기
	성인 대상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6.4분기
	'26년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지침 중점사항 내 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5.4분기
4	제도적 기반 마련		
4-1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정 추진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중
4-2	학교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정립 및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26.1분기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운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중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특위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25.4분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시 개정 추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중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연구소 지정 추진	교육부 기획담당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26.1분기